

## 제주에서 설악까지 '의혹과 송사' 투성이 조계종 잇단 악재에 '곤혹'

조계종이 잇단 악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공중과 방송에서는 동국대 신정아 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인제 백담사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제주 관음사 겸수인계과정에 서의 물리적 충돌 등을 잇달아 내보내고 있다. 일간지에서도 연일 동국대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이 사안을 조계종 권력자들의 산물로 보고 있다. 이제 '조계종 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균열이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최남단 제주도(관음사부터 시작해 경상도(통도사, 은혜사), 충청도(마곡사), 강원도(백담사), 경기도(봉선사) 등 문제가 없는 지역 찾기가 더 쉬운 지경이다. 또 최근 1~2년간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변천 사안만도 관음사, 마곡사, 은혜사 등 여러 개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대처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불교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동국대 문제에 대해 이사장 영배 스님을 비롯해서 이사회 그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사회 차원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지만 그 뿌리가 깊다. 동국대를 관

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도 '동국대 신정아 교수 채용 의혹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활동은 지지부진하다.

문제를 제기한 정운 스님 또한 청와대 개입 설을 흘려놓고 잠적해 버렸다. 8월 29일 종단 대변인인 기획실장 승원 스님의 입을 빌어 "누구에게도 외압 받은 적 없다"는 얼굴 없는 해명을 했지만 의혹만 더 커졌다. 또 이 문제에 종단까지 개입한 듯한 인상을 줬 역효과만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백담사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해명 기자회견도 의혹만 더 키웠다는 게 종문이다. 공중과 방송과 일간지에서 투서 내용을 바탕으로 백담사 주지 일문 스님이 국고보조금 수습의 원을 설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일문 스님은 8월 29일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횡령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전 약속과는 달리 기자회견문만 읽고 자리를 땀다. 횡령이 아니라 구제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명쾌하게 설명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관음사 또한 문제의 핵심인물인 중원 스님은 뒤로 빠진 채 몇몇 스님과 신도단체들이 대리전을 펼쳤다. 시흥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이

관음사와 보현사를 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 모습이 여과 없이 공중과 방송에 보도됐다.

마곡사 주지 구속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불교 환경연대 대표 수경 스님은 <불교평론> 보도에서 "지금 조계종단은 '권력'과 '돈'이라는 두 바퀴의 수레를 타고 위태로운 질주를 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자정기구' 설립하고 '종립 율원' 세워 승풍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희옥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원장도 "조계종단은 10년 전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 같다"며 "성직자가 아닌 수행자인 스님들 또한 물질만능시대에 휩쓸린 것 같다"고 씩씩했다. 또 "호법부나 호계원 등 종단 자정기구가 제 역할을 못해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종단 외부로 확산되고 있다"며 "종단의 수장인 총무원장 스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종단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종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남동우·여수령 기자



이 순간의 '초발심' 영원히...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학)은 8월 29일 김천 직지사서에서 33기 행자교육원을 개원했다. 총 196명의 접수자 가운데 입학고사와 갈마를 거친 169명이 8월 30일 고불식을 봉행했다. 입학자 중에는 인도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캐나다에서 온 외국인 행자 4명도 포함됐다. 이날 고불식에서 청학 스님은 "교육기간 동안 출가정신을 견고하게 확립하고 수행력을 증진시킬 것"을 행사자들에게 당부했다. 김천 직지사/글·사진=박재완 기자

### 새 연재

송천우 교수가 풀어 쓰는  
**천태지자 '수습지관선법요'**  
 ▶8면에 '지상강의' 중앙승사대 송천우 교수가 '지관(止觀)'의 길로 독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천태지자 스님이 쓴 '수습지관선법요(修習止觀禪法要)'는 처음 발심한 사람이 수증(修證)하고 입도(入道)하는데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지관 법문을 총론적으로 밝힌 개론서입니다.

도 스포츠 한국의 장명수(張明洙) 법명(如舟) 편집위원이 '쉽게 풀어 쓴 불교기본교리'를 연재합니다.  
 ▶'성당심리학과 불교' 11면

소중한클리닉 소중한물문의원  
**여동현 원장의 건강칼럼**  
 소중한클리닉의 소중한물문의원 여동현 원장이 매주 여러분에게 한의학 건강 상식을 전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당뇨·비만 등의 성인병을 비롯해 수행자가 알기 쉬운 척추질환 등에 대한 원인을 짚어보고 치료법과 예방법을 살펴봅니다. 금주부터 19면.

### 사회

#### '현대불교신문' 지사장님 모십니다

불법홍포의 주역으로 포교 사업을 전개할 참신하고 역량있는 현대불교신문 지사장을 모십니다.

#### 모집 지역(8개 지역)

- 강원동부: 강릉 동해 삼척 일원
- 강원서부: 춘천 원주 정선 영월 평창 홍천 일원
- 경기남부: 안산 화성 용인 안성 일원
- 경기북부: 포천 연천 동두천 파주 일원
- 충남: 대전을 제외한 충남 전지역
- 경남남부: 마산 창원 일원
- 광주전남: 광주 및 전남 전 지역
- 전북: 전북 전지역
- 제주도: 제주 전지역

#### 사업내용

- 지역 내 구독확장, 광고수주 및 수익 사업 전개
- 기사 제보 및 취재활동 지원

####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활동 계획서, 신분증 복사본
- 제출기한: 2007년 9월 13일(목)
- 제출방법: 우편(13일 도착분만 유료) 또는 직접 방문 접수

#### 제출처: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2004-8234

####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주)에이치비씨)

## 문화재 관람료 논란 재점화

### 교계단체 등 잇단 토론회 개최...해법 마련 고심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온 구례 천은사 주지가 8월 28일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또 합천 해인사와 보은 법주사도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는 등 관람료 징수 문제가 급박하게 다시 대두되는 가운데 조계종 중핵 모임과 교계 단체들이 해법을 위

한 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책모임인 금강회·보림회는 8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별 해법을 제시했다.

금강회·보림회는 1단계로 조건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문화재에 대한 입체적 보전과 관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2단계로 정부, 불교계, 학계, 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형 조직을 구성하고, 3단계로 국가지정 불교문화재 현황과 사찰 및 국립공원 훼손에 대한 포괄적인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단계로 사찰 소유 문화재 보호, 관람료 징수, 국립공원·사찰림 보호 대책을 포함하는 사회적 합의 및 제도,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강회·보림회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책임성이 강한 저명인사를 위원장으로 한 가정 '불교문화보전과 국립공원환경보호를 위한 협의연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이 기구는 '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 진행단계'와 같은 로드맵을 설정하고 다중이 공감 가능한 대안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교미래포럼(공동대표 도완·배영진)도 8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

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NGO리서치윤남진 부소장은 "현재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은 상대의 입장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기본적인 노력조차 없었다"며 "정부, 조계종, 시민사회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주장을 경청하고 상호 신뢰 속에 구체적 합의를 도출,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부소장은 "문화재관람료 논란은 정부와 조계종, 시민사회단체 등 공동의 책임이며, 정부와 조계종이 주도적 입장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단순한 입장표명 성격의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고, 중기적으로는 문화재관람료의 중앙 집중 관리 및 공익적 활용의 증대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문화재관람료의 징수위치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주원·남동우 기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전 화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전화 010-7504-4521 (김영희 변호사)  
 017-535-068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태선 변호사)

##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株)坪建이 열어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니다. 평건은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개념 건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뒤처지게 됩니다. 이에 평건은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교도량(道場)도 변화해야 합니다. 즉 수천년 전통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 현대에도 어울려 지는 멋들어진 도량 말입니다. 저희 불자들이든 물론이고 불교성향을 가진 일반인들이 와서 보고 편안히 공부할 수 있는 도량이야말로 불법홍포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불자님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도 진정한 미의 건축 발전의 역사를 물려 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시공분야**  
 고건축[사찰건축] | 현대건축 | 인테리어 | 건축 및 불사 컨설팅

**(株)坪建**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70-10 신교빌딩 4층 110-032  
 TEL 02)722-0094 / FAX 02)741-0096  
 http://pyeonggeon.com E-mail : pg@pyeonggeon.com

construction & design PYEONGKEON